

불신 키우는 한빛원전...6호기 원자로 헤드 추락사고 '쉬쉬'

지난 8월 교체과정서 파손될 뻔...방사능 유출 관련있는 핵심부품 '아찔' 한수원 "비파괴검사 이상 없어 고시 안해"...최근 5년간 안전사고 41건

한빛 원전 6호기(7급경수로형, 1000MW급) 계획 예방정비에서 원자로 헤드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문제가 없다'며 사고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으나 원자로 헤드는 방사능 유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핵심부품이어서 지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9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오후 7시 20분께 한빛6호기의 교체용 원자로 헤드가 안착대 이동 작업 중 임시덮개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체용 원자로헤드는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수평 상태로 반입됐고 다음날 오후 6시 50분께 원자로 헤드를 일으켜 세우는 직립작업 중 60도 정도 세워 지던 과정에서 임시덮개 위로 추락하며 발생했다.

한수원은 주와이어가 처지면서 주와이어와 보조와이어의 장력에 편차가 발생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교체용 원자로 헤드가 안전관련 주변 기기 및 구조물과의 접촉이나 충돌이 없었다는 점에서 교체작업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후 구조건전성 평가와 응접부 비파괴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이상 없었다'고 한수원은 밝혔다.

하지만, 안전검사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아닌 원자로 헤드 제조사가 수행해 객관성을 의심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자로 헤드 추락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자로 헤드가 충격으로 인해 금이 가는 등 파손으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원자로 헤드는 원전의 최상단으로 핵연료를 담고 있는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단순 '슬리핑'(미끄러짐)으로 볼 수 없다며 한수원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지적했다.

이정은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이번 사고는 원자로 헤드가 임시덮개 위로 미끄러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원자로 헤드를 옮기는 작업이 허술하게 이뤄진 점으로 미뤄, 추후에는 헤드가 원자로 용기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 원자로 용기와 충돌했다면 내부 구조물에 충격이 가해져 핵연료가 깨지는 대형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원자로 용기 내 핵연료가 깨지게 되면 엄청난 유독가스가 나오고 격납용기가 오염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원전이 된다"며 "한수원과 업체 직



한빛6호기 교체용 원자로 헤드가 지난 8월 14일 안착대로 이동하던 작업 중 임시덮개 위로 추락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원자로 헤드 원자로 압력용기를 덮고 있는 장치다. 원자로 헤드(Head) 외부에는 핵분열 반응속도를 제어하는 제어봉을 삽입 또는 인출하기 위한 제어봉 구동장치가 부착돼 있고, 하부에는 노심(爐心)의 핵연료집합체에 삽입돼 핵분열 과정을 감시하는 계측기가 지나는 노즐이 설치돼 있는 핵심부품이다.

원 뿐 아니라 영광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수원은 "원자로 헤드가 추락한 게 아니라 미끄러짐 사고"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



영광 한빛원전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간에 진행된 원자로 헤드 관통관 보수-용접 과정에 투입된 작업자 일부가 무자격자로 확인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빛원전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소속 조인철(광주 서구 갑)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5개 원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에

서 발생한 사고는 최근 5년(2019~2023년)새 41건에 달한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8월 2차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 허가 신고(75mm 이상 구멍, 9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27일 영광군에 다시 제출했다. 영광군은 3번째 제출된 굴착 허가 신청서도 반려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던파 아이템' 무단생성·판매 수십억 챙겨 게임개발사 전 직원 징역 7년·26억 추징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법원이 유명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아이템을 무단 생성·판매해 수십억원의 챙긴 게임개발사 전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26억원대의 추징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수감된 A(3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추징금 26억 80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던파 제작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0년 6

월 퇴직한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게임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 국적 A씨는 회사내 자신의 계정과 동료 직원 계정, 운영을 위임 받은 회사에게 부여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관리계정에 접속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게임내 화폐단위로 7조여골드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시장거래 가격 360만여달러, 범행기간 최저 원화기준으로 환산하면 39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범죄수익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골드바와 고급차를 구입하고 수억원의 제주시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A씨는 2020년 이른바 '궁뎅이맨'이라고 불린 다른 직원이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훨씬 규모가 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7년과 27억 8000여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유지했으나 "범행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 또는 판매수익금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아니다"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의 수익은 범행수익과 가상화폐 투자 수익이 혼재돼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수익금(2억여원)을 제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폭력사태로 번진 반려견 배설물 갈등

무안서 실랑이 벌이다 이웃 주민 폭행한 60대 입건

반려견 배설물 수거를 둘러싸고 승강기하다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무안경찰청은 A(69)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무안군 주택가에서 이웃주민 40대 여성 B씨를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각목이 부러질 정도로 머리와 팔 등을 폭

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B씨에게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라'고 종용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말다툼하다 감정이 격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경찰관인 A씨는 평소 B씨와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전남 경찰 5년간 114명 법정에 섰다

한달 2명 꼴 현행범 위반

광주·전남 경찰 114명이 지난 5년간 법을 위반해 법정에 섰다. 한 달에 2명 가량 현행범을 위반한 셈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 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전남지역 경찰 공무원 114명(광주경찰 33명, 전남경찰 81명)이 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 중 현행범 위반으로 기소 처분된 사례가 전남경찰청이 4번째로 많았다. 광주·전남 경찰 기소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0명, 2020년 15명, 2021년 22명, 2022년 34명, 2023년 23명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전국을 통틀어 1266명이 기소됐으며 위반 법률은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 가중법(44명) 순이었다. 성폭력 처벌법(37명),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 기소도 다수 있었다.

하지만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각각 71명(5.6%), 124명(9.8%)에 불과했고 강등은 80명(6.3%), 정직은 316명(25.0%)였다. 징계를 받지 않은 경찰관도 4040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민 기자 kdi@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 의원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4일 신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을 상대

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